

‘한국 이중 위기’ 3가지 처방

한국의 외환보유고는 지난 6월 말 23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작년 가을 외환위기 당시의 악몽에서는 벗어났지만 안도의 숨만 쉴 때는 아니다. 시간을 벌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낫다. 독감 계절이 오기 전에 신종 플루 백신 생산을 위해 분초를 다투는 마중가집이 필요하다. 외환보유고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안된다. 금융제도의 체질 개선이 따라야 한다.

매경의 창

신현송

프린스턴대 경제학과 교수



금 증가에 묶여 억제하는 방법, 그리고 금융제도의 구조적인 체질 개선이다. 그러나 첫째와 둘째는 부작용이 심하다. 외환보유고는 단기 처방은 되나 장기 처방은 안 된다. 달러의 장기적 취약성을 감안할 때 투자 손실 위험은 물론 국내 통화량 조절에 어려움이 생기고 국제정치 측면에서 미국 정치인들로부터 환율 조작의 누명을 쓰기 쉽다. 금융제도의 취약성을 덮어두고 외환보유고만 늘리는 건 금이 간 벽에 벽지만 한 겹 더 붙이는 격이다.

두 번째 대출 억제 같은 양적인 규제를 성공적으로 적용한 선진 경제는 찾아보기 힘들다. 금융시장 왜곡을 불러오고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낳기 쉽다. 유일한 자산 증가 억제 수단으로는 금리 인상을 통한 통화정책이 있지만, 실물경제를 고려할 때 선택될 수 없다.

해답은 세 번째 길, 자금조달의 다양화에서 찾아야 한다. 외환위기를 부르는 은행 부

채의 문제점은 단기 부채고 달러 부채이기 때문이다. 장기 자금을 원화로 조달할 수 있다면 문제는 해결된다.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갖춘 제도로는 덴마크, 독일, 스위스 등 유럽에서 200년 역사가 있는 ‘커버드 본드’ 제도가 있다.

커버드 본드란 은행이 발행한 장기 채권으로 지정된 은행 자산에 대한 선순위권이 있고, 은행 자체의 의무가 이중으로 뒷받침되는 채권이다. 한국에서 유행하는 후순위채와 달리 유럽의 커버드 본드는 국제에 버금가는 안전자산으로 취급된다. 또한 은행 자산을 떼어 팔아 금융경기 증폭을 키우는 미국식 증권화 과정과는 관이하게 다른 제도다.

커버드 본드는 세 가지 이점이 따른다. 은행은 장기적 안정자금을 조달한다는 것, 투자자는 단기 금리 하락에서 벗어나 장기 저축 수단을 찾는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사회적 이익이 크다. 은행 자금원 다양화, 안정적인 금융제도 구축, 저금리 시대에 은행 예금을 탈피하는 투기성 자금을 잡는 효과 등 복합적인 이점이 있다. 덴마크는 미국 못지 않은 부동산 시세 하락에도 끄떡없는 금융제도 내구성을 보였다.

한국 실물경제의 성장은 세계의 부러움을 사지만 금융제도는 항상 아킬레스건이었다. 선진국 대열에 끼려면 이 치명적인 약점을 보완해야 한다.

미디어 새 식탁은 차려졌다

말 많고 탈 많은 미디어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참으로 지루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벌였다. 해외에서 국회의 대처 상황을 인터넷 방송으로 지켜보면서 우리의 정치 수준에 대한 자괴감까지 들었다. 미국 하원에선 소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한다. 상원에선 다수결 원칙에 따라 속전속결로 처리한다.

테마진단

심재철

고려대 언론학부 교수



여당은 인내심을 발휘해 단독 상정의 순간까지 야당 의견을 수렴하려 했다. 야당은 국민여론의 다양성을 내세워 반대했다. 여당은 미디어 콘텐츠 산업의 발전으로 맞섰다. 이런 이성적 논리라면 왜 그렇게 격렬하게 다투어야 했는지 의구심이 들 정도였다.

민주사회에서 여론의 다양성은 당연히 보장돼야 한다. 미디어 산업의 국제적 경쟁력도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다. 양쪽 다 타당하며 타협할 지점을 찾아야 했다. 하지만 찬반 논리의 이면을 살펴보면 여당은 국민정서를 움직이는 막강한 지상파를 더 이상 야당이나 진보세력의 영향력 아래 둘 수 없다는 의지를 표현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야당은 방송까지 보수세력에 넘어간다면 ‘차기 집권은 물 건너간다’고 가정하는 듯 보인다.

이러한 가정은 양쪽 다 잘못됐다. 여론의 다양성을 위해서라면 지상파에서 보수적인 의견이 자연스럽게 나타나야 한다. 동시에 미국이나 영국 사례에서 보듯이 보수적 언론 환경에서 진보세력이 집권하는 승률이 높아질 수 있다. 보수 이념에 충실한 언론사가 정치나 경제현실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

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몰라도 너무 모른다. 수용자 입장에서 신문과 방송 뉴스의 차이가 없어졌다.

왜 멀티미디어 시대라 하는가. 온갖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뉴스가 실시간으로 무차별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이다.

뉴욕타임스가 오죽했으면 지난 주말 작고한 워터 게이트와 같이 국민적인 신뢰를 받는 언론인이 앞으로 나올 수 없다고 했을까. 인터넷에서 한 번 클릭으로 온갖 뉴스를 접하는 시대에 특정매체의 여론독점이란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

국회에서 보여준 갈등 해결 방식은 국민에게 감동을 줄 수 없는 드라마였다. 여당도 너무 많이 양보했다. 상호타협이 실패했고, 뉴스시장의 진입장벽을 충분히 거두는 데도 성공하지 못했다.

그나마 대기업에 방송시장이 열리게 됐다. 준비 없이 들어갔다가 속절없이 당하는 게 언론시장의 숙성이다. 그래서 ‘가장 좋은 땅은 가장 훌륭한 농부에게 경작돼야 한다’고 하지 않았다. 뉴스에 대한 최종 평가는 수용자가 할 것이다. 새 미디어법 통과를 기점으로 각종 언론관계 법안과 우리 사회의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시대 추세에 맞게 선진화해야 할 때이다. 정부가 공언했다시피 일괄타격 방식으로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 새롭게 전개되는 미디어 시장에서 ‘누가 승자가 되고 누가 패자가 되는지’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설

금융지주사법 통과 은행 빅뱅 계기로

금융과 산업자본을 갈라 놓은 장벽이 낮아졌다. 새 금융지주회사법이 지난 22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10월부터는 산업자본이 KB, 우리, 신한, 하나금융과 같은 은행지주회사 지분을 9%까지 가질 수 있게 된다. 지분 소유한도가 4%로 묶여 있는 지금보다 대기업의 은행업 진입 문턱이 낮아지는 것이다.

대기업 지분이 18%를 밑도는 사모펀드(PDF)나 이해 상충 문제가 없는 공적 연기금은 산업자본으로 보지 않도록 한 것도 금산분리의 벽을 낮추는 조항이다. 개별은행 지분에 대한 산업자본의 소유한도를 9%로 올리는 은행법 개정안은 이미 지난 4월 처리됐다. 반쪽짜리였던 금산분리 완화법은 금융지주사법까지 통과되면서 온전한 모습을 갖췄다.

금산분리 완화법은 국내 은행산업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이다. 잘만 활용하면 은행산업 빅뱅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다. 그동안 국내 자금이 역차별을 받아 대부분의 은행들이 사실상 외국자본에 넘어간 문제를 시정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이제 은행의 몸집을 키워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는 기업들이 많아질 것이다.

일단 은행과 지주회사에 대한 소유제한 완화는 은행 민영화와 자본 확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정부가 우리금융과 산은지주, 기업은행 지분을 매각하거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자본 확충이 절실했던 시중은행들이 증자에 나설 때 풍부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상성이 공개적으로 은행업 진출 의사가 없다고 밝힌 것처럼 현실적으로 대기업들이 당장 은행업에 뛰어들 가능성은 많지 않지만 은행들은 산업자본 유치를 적극성을 보일 필요가 있다. 자본이 튼튼해진 은행이 대출을 늘려 기업 투자를 돕는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새로운 전략적 투자자가 은행 경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자극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금산분리 완화의 부작용을 막으려면 더욱 정밀하고 효과적인 금융감독이 필요하다. 특히 은행이 대기업의 사금고로 전락하고 몇몇 그룹에 경제력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감독 강화가 필수적이다. 은행 대주주가 되려는 기업에 대한 사전 적격성 심사를 철저히 하고 사후적으로도 기업의 부실이 은행에 전가될 수 있도록 내부거래와 우회거래를 효과적으로 감시해야 함은 물론이다.

증권사나 보험사가 주력인 지주회사가 제조업체를 자회사로 둘 수 있도록 한 것은 금융과 제조업체가 뒤섞여 있는 대기업집단이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기 쉽게 하려는 것이다. 이 조치의 취지를 잘 살리려면 대기업집단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만들고 금융·산업 부분의 동반 부실을 막는 게 중요하다.

민영화·자본확충에 도움

금융·산업 원원전략 찾듯

부작용 막을 감독 강화할

한은·금감원 정보공유 거부 한심하다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공유 가능한 정보를 특별한 사유도 없이 서로 제공하지 않고 자신의 영향력 행사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여차부니없는 일이다. 두 기관의 임무는 서로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한은은 물가관리뿐 아니라 전반적인 거시경제 감독의 필요성이 높아졌으며, 이와 관련해 개별 금융회사의 정보 접근 필요성도 커졌다. 금감원도 개별 금융회사에 대한 정보뿐 아니라 거시경제 전반의 정보 획득 중요성이 커졌다.

그런데도 두 기관이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각기 수집·작성하는 바람에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됐다. 또 두 기관으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자료를 중복요구함으로써 겪은 시중은행의 고충도 굳이 말할 필요가 없다. 한은과 금감원은 2004년 1월 양해각서를 체결해 상호 정보를 공유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감사 결과를 보면

이렇게 철저히 무시당한 셈이다.

두 기관이 정보 공유를 꺼림은 물론 정보 제공 기준도 왔다 갔다 했다. 가령 한은은 2007년 4월 금감원에서 108건의 정보공유 요청을 받았으나 이 중 16건만 제공하고 나머지는 통계 응답자의 비밀보호 등을 이유로 제공을 거부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종전에 제공하지 않았던 7건의 자료를 추가로 방침을 변경했다. 금감원도 한때 한은에 못주겠다고 했던 자료를 나중에 제공하는 등 오락가락했다.

더 이상 두 기관이 정보 제공을 거부해선 안 된다. 금융회사에 이종으로 자료를 요구해서도 안 된다. 두 기관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유사시 최종 대부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하는 한은에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검사권을 부여하는 쪽으로 한은법 개정이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 보다 넓게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은, 금감원 등이 정보의 벽을 허물어야 함은 물론이다.

무책임한 여야 정치싸움에 희생양된 비정규직

비정규직법 개정안 처리가 결국 6월 임시국회 종료일(25일)을 넘겨 9월 정기국회로 미뤄질 모양이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미디어법 단독 통과 여파로) 비정규직법 개정안은 당분간 처리하기 힘든 만큼 가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려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야에 장외에서 정권퇴진에 매진하겠다고 한다. 여당, 야당 모두 해고 위기에 처한 비정규직이 죽든 살든 3개월가량 방치하겠다는 것이다.

사용기간 2년이 도래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여부를 노동부가 얼마 전 조사한 결과 정규직 전환은 이달 들어 13일 동안 1644명으로 27%에 불과했다. 반면 해고된 근로자는 4325명으로 73%를 차지했다. 하루 333명 꼴로 해고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추세라면 해고 근로자는 1개월이 지나면 1만명으로 늘어날 게 된다. 비정규직법 개정이 지연될수록 이 숫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고 9월 정기국회로 미뤄진다면 3만명 가까운 근로자가 해고의 운명을 맞게 된다는 뜻이다.

그나마 이 숫자도 실제보다 과소평가했을 가능성이 크다. 비정규직 근로자 중 94%가 중소기업에 몰려 있고 그중에서도 3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 70%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사업장에서 해고되는 인력까지 빠짐없이 집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드러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근로자들이 생계 수단을 잃고 삶이 비감으로 내몰리고 있음을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해고대란이 없으니 없으니 한가한 임시세를 벌이며 이런 사태를 초래한 정치인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들인가. 한나라당은 비정규직법 개정안 처리에 열의가 있는 양 행세했지만 정작 직권상정 과정에서는 법안 처리를 외면했다. 민주당은 비정규직법 개정을 막으면서 “정부가 야당이 해고 사태를 조정하고 있다”며 정치공세에만 열을 올렸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한노총이나 민노총처럼 조직화돼 있다고 해도 과연 이렇게 소홀하게 다뤄지지 말고 싶다.

당신이 원하는 부동산의 꿈을 실현시켜드립니다!

당신이 꿈꾸는 부동산 재테크 동국대학교 부동산최고경영자과정에서 실현시켜드립니다.



행정대학원 제23기 부동산최고경영자과정

교/육/구/성

- 교육기간 2009. 9. 8(화) ~ 2009. 12. 23(수) (16주, 4개월)
- 교육인원 00명(서류심사에 의한 선별)
- 교육시간 매주 화, 수 (18:00~21:30)
- 교육내용 부동산 정책 / 부동산 시장 / 부동산 금융 / 부동산 투자사례 등

문/의/처

- 상담문의 02) 2260-8574 / 02) 2260-8572
- 팩스번호 02) 2263-8576
- 홈페이지 http://www.dgureceo.com

응/시/절/차

- 원서교부 및 접수 2009년 8월 27일(목)까지
- 제출서류 입학지원서(소정양식1부), 사진 2매(온라인 지원시 사진파일 1개)
- 원서교부 방법 홈페이지에서 입학지원서 다운로드, 우편발송신청
-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 : (www.dgureceo.com 접속 후 온라인 지원)
 - 이메일접수 : bgw0817@dongguk.edu
 - 우편접수 : 서울시 중구 필동3가 26번지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최고경영자과정 교육연구실 담당자 앞(우100-715)
 - 방문접수 :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부동산최고경영자과정 교육연구실
 - FAX 접수 : 02) 2263-8576

교/육/특/진

- 01. 동국대학교 총장 및 행정대학원장 명의의 수료증 수여
- 02. 소정의 논문을 제출하고 심사에 통과한 자는 최고학위기 수여
- 03. 부동산최고위탁자격인증서 수여
- 04. 원우회 조직을 적극 지원하며 세미나 등을 통한 전문가 네트워크 구성 지원

교/육/과/장

- 부동산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정보
- 실무에 적용 가능한 교육
- 지속적인 투자정보 제공
- 동문회 활동을 통한 CEO네트워크

